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병률 前최고재판소장 사망(1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북한 최고재판소장을 지낸 김병률이 83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병률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며 영전에 조화를 보냈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병률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인 최고재판소 고문'으로 소개함.

● 北 김정은, 조명록 사망 3년 맞아 '전우관' 시찰(11/9, 노동신문)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 체제에서 군부 1인자였던 조명록 전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사망 3년을 맞아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에 있는 '최고사령관과 전우관'을 찾았다고 노동신문이 9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전우관에 전시된 조명록의 사진과 유품들을 둘러보았으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충성한 '혁명전사들'의 사진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한명씩 부름.
- 김 제1위원장은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하였던 인민군대의 지휘성원들은 최고사령관과 사상도, 뜻도, 숨결도, 운명도 같이 하였다"고 말하고 전우관을 새로 꾸리라고 지시함.

■ 김정은동향

- 11/ 5 김정은 黨 제1비서, 11.5 故 '김병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인 최고재판소 고문) 영전에 화환 전달(11.5,중통)
- 11/ 6 김정은 黨 제1비서, 옥류아동병원과 문수기능회복원에 운전기재 전달(11.6,중방)
 - 선물 전달모임, 11.5 최태복(黨비서), 한광복(黨부장) 등 참가하 각각 진행
- 11/9, 김정은 黨 제1비서, 조명록 사망(11.6) 3돌 즈음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에 있는 '최고사령관과 전우관' 방문(11.9,중통·중방)
 - 최룡해, 김수길, 럽철성, 리재일 동행 및 '전우관'을 새로 잘 꾸리는데 대한 가르침 하달



■ 기타 (대내 정치)

- 김형권(김일성 숙부) 생일(11.4) 108주년 즈음 '김일성과 함께 주체 혁명위업 개척과 항일무장혁명 투쟁업적' 회고 칭송(11.4, 중방·노동신문·평방/총대와 더불어 빛나는 혁명가의 한생·견결한 혁명투사의 고귀한 한생)
- 박봉주(내각 총리), 순천화학연합기업소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현지 요해(11.4, 중통·중방)
- 박봉주(내각 총리)·최태복(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 등 당과 국가 책임일꾼들, 11.9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 참가자들 숙소 방문(11.9, 중통)
 -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 참가자들, 11.9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및 대성산혁명열사릉 참관(11.9, 중통·중방)

나. 경제

● 北 "번 것만큼 분배"...경제개선 조치 '착착'(11/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지난 6일 북한의 대표적 경공업 공장인 평양기초식품공장이 올해 생산력 증대를 위해 운영 방식의 변화를 시도한 사례를 소개함.
- 신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관리 개선을 언급한 뒤 평양기초식품공장이 시범단위가 됐다며 "전반적인 경제관리에서 개변(근본적으로 바꿈)을 가져오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그를 현실로 구현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함.

● 北, 지방개발에 속도내나...'자체 외화벌이' 강조(11/10, 연합뉴스; 경제연구)

- 최근 북한 매체에서 지방공업의 외화벌이와 지방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내용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고 10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의 학술지 '경제연구'는 지난 10월 30일 발행한 최신호에서 지방공업 발전에 관한 논문을 3건이나 실었음.
- 잡지는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지방예산수입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중요방도'라는 논문에서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정상화에서 중요한 것은 시, 군들에서 자체로 외화를 벌여 필요한 원료, 자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다. 군사

● 北, 훈련 중 희생 해군장병에 국가표창(1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당국이 지난달 훈련 중 숨진 해군 장병에게 국가표창과 노동당 당원증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통신은 "10월 중순 해군 제790군부대 구잠함 233호 지휘관들과 해병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초소를 지키며 전투임무를 묵숨바쳐 수행했다"면서



- 중앙통신은 "국가과학원에서 정보산업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들을 개발하고 있다"며 산하 연구기관들의 성과를 소개했으며,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는 공작기계 등의 'CNC'(컴퓨터수치제어)화를 위한 조종장치인 'CNC-16'과 'PLC'(프로그램논리제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개방형 PLC 프로그램'을 내놓았음.

● **北 식량배급량 10월에 크게 늘어(11/9,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식량배급량이 지난달 크게 늘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를 인용해 9일 전함.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담당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지난 10월 주민 한 명당 하루 390g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밝힘.

2. 대외관계

가. 일반

● **북한 서커스 국제무대서 여전히 강세(11/4, 연합뉴스)**

- 북한이 '국가적 예술로 자랑하는 교예공연(서커스)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들어서도 국제무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신화망 등 중국 매체들을 인용해 4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에 따르면 북한 국립평양교예단은 3일 중국 허베이성 스톤자좡(石家莊)에서 폐막한 제14회 중국우차오(吳橋)국제서커스대회에서 '공중그네 타기 곡예'로 최우수상인 금사자상을 받음.

● **방북 이노키 의원, 日 체육단체 평양사무소 개설 합의(종합)(1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일본 비영리법인 체육평화교류협회 이사장 안토니오 이노키(Antonio 猪木) 일본 참의원 의원이 북측 조일(북일)우호친선협회 마철수 서기장과 일본 체육교류단체의 평양 사무소 개설에 합의했다고 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中 사법당국, 상호협력 양해문 조인(11/4, 조선중앙통신)**

- 북중 양국의 사법당국인 북한 최고검찰소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문을 조인했다고 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최고검찰소와 최고인민검찰원의 협조에 관한 양해문이 중국 베이징에서 조인됐다"며 리철 최고검찰소 제1부소장과 후저권(胡澤君) 최고인민검찰원 상무부검찰장이 양해문에 서명했다고 전함.

● **北, 美 NSA 도청 파문 비난..."인권유린의 극치"(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외국 정상 등에 대한 무차별적 도청



파문이 불거진 데 대해 미국의 '인권유린' 범죄의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5일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함.

- 중앙통신은 '세상 못된 짓만 골라 하는 인권유린의 왕초'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강행한 장기적이고 무차별적인 전화도청 행위가 연이어 드러나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며 "개인 서신을 비롯해 엄격히 준수돼야 할 통신의 비밀을 도청하는 것은 초보적인 인권 개념도 없는 인권유린 행위의 극치"라고 비난함.
- **日체대 대표단 방북... "북일 교류 강화"(종합)(1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마쓰나미 겐시로(松浪健四郎) 이사장이 이끄는 일본체육대학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함.
 - 김영일 노동당 비서는 일본체대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에 참석해 "앞으로도 일본의 여러 인사와의 접촉과 교류를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마쓰나미 이사장도 "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북·일 사이의 우호관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함.
- **美 스탠퍼드 의대, 北에 결핵 치료기술 전수(1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진이 이달 12일 방북해 북한 의료진에게 결핵 진단과 치료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 스탠퍼드대 의대 의료진은 평양 중앙결핵예방병원에서 2주간 북한 의료진과 보건 전문가에게 결핵 진단과 간호, 치료 등의 기술을 교육할 예정이며 교육은 미국 민간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벅들(CFK)'의 주선에 따른 것으로, 앞서 올해 봄에도 두 차례 진행됐음.
- **北 "한반도 평화 위협 진범은 미국... 대화 구걸 안 해"(1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고 있다면서 평화를 위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밝힘.
 - 신문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진범인은 미국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정세를 몰아온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주장함.
- **北 장성택, 日 체육대표단과 면담(종합)(1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북한을 방문 중인 안토니오 이노키(Antonio 猪木) 일본 참의원 의원 등 일본 체육기관 대표단을 만났다고 전함.
 - 중앙통신은 장 부위원장이 일본 체육평화교류협회 이사장인 이노키 의원과 그 일행, 마쓰나미 겐시로(松浪健四郎) 이사장을 비롯한 일본체대 대표단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 **北, 러시아 극동 성장 잠재력 주목...경제협력 강조(11/7,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7일 입수한 북한의 계간 학술지 '경제연구' 최신호(10월 30일 발행)는 '러시아 원동(극동) 지역 경제발전의 최근 특징'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러시아가 극동 지역 개발에 힘을 기울이는 데 주목함.
 - 논문은 러시아 극동 지역이 광물·에너지·해양·삼림 자원이 풍부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는 최근 원동 중시, 아시아태평양 중시를 내두고 원동 지역의 경제발전에 적극 달라붙고 있다"고 강조함.

- **北, 스페인에 대사관 개설 예정(1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스페인에 곧 대사관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스페인 언론을 인용해 전함.
 - 스페인 일간 '엘문도'와 '유로파프레스' 등은 스페인 외교부가 북한의 대사관 개설 요청을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북한 대사관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아라비카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고 북한은 이미 건물 임차를 마쳤다고 밝힘.

- **美 한인 의사들, 방북해 의술 전수(1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에 사는 한인 의사들이 지난달 북한을 찾아 현지 의료진에게 최신 의료기법을 전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함.
 - 미국 내 한인 의사들의 모임인 재미한인 의사협회 소속 8명은 지난달 1일 방북, 평양의 평양외과대학병원과 적십자병원에서 북한 의사들을 상대로 의료 연수를 실시했으며 연수는 신경외과, 방사선과, 안과, 마취과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짐.

- **北 노동신문, 日 조선학교 지원 중단 비난(1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북한 핵실험 등을 이유로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잇달아 중단한 것에 대해 "교육문제를 외교적, 정치적 흥정물로 삼으려는 치졸한 놀음"이라고 비난하며 철회를 촉구함.
 - 신문은 '조선학교에 대한 비열한 차별행위'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우리 인민은 일본반동들이 치졸하게 늘어날수록 대일 적개심으로 더욱 끓고 있으며 그 죄과를 반드시 결산할 의지를 굳게 다지고 있다"라고 경고함.

- **北 태블릿PC, 경매 사이트 '이베이'서 판매(11/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생산하는 태블릿PC '삼지연'이 세계적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함.
 - 이베이에서 삼지연의 경매는 4달러 15센트에서 시작해 하루 만인 지난 8일 오후 경매가가 200달러까지 뛰었다고 RFA는 전함.



- **北** 신문 "아태지역 평화 위협 장본인은 미국"(1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력 증강으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장본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현시기 미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추구하는 기본 목적은 힘으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견제, 제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유엔의 美 쿠바제재 반대 주목... "제재 포기해야"(11/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유엔이 최근 미국의 쿠바 제재 철폐를 요구한 데 주목하며 미국이 타국에 대한 '제재 책동'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제재의 썩은 울가미를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유엔이 지난달 말 미국의 쿠바 제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한 것은 "반제자주를 억누르고 세계제패 야망을 기어코 실현하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더는 용납하지 않으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다시금 명백히 보여줬다"고 평가함.
- **北**, 日 독도 영유권 주장 비난... "재침 노린 도발"(11/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대해 "재침을 노린 계획적인 도발행위"라고 거듭 비난함.
 - 신문은 '우긴다고 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독도로 말하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신성한 고유 영토"라며 이같이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중통사 논평】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도청 관련 '개인서신을 비롯한 통신의 비밀을 도청하는 것은 초보적 인권개념도 없는 인권유린행위의 극치'라며 "인권유린의 왕초가 바로 미국"이라고 비난(11.5, 중통/세상 못된 짓말 골라하는 인권유린의 왕초)
- 장성택(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11.6 日 국회 참의원(이노키 간지)과 일행·日 체육대학대표단과 담화(11.6, 중통·중방)
- 리종무(체육상), 김성남(당 중앙위 부부장), 마철수(조일우호친선협회 서기장), 신동규(조선체육대학 학장) 등 참가

나. 6자회담(북핵)

- **中** 우다웨이 방북...6자회담 논의할 듯(종합)(11/4, 조선중앙통신)
 -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4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우 특별대표와 그 일행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



들의 방북 목적과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음.

- **中 우다웨이, 방북 일정 마치고 귀국(1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8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우 대표와 그 일행이 비행기 편으로 귀국했다고 전했으나 닷새간의 방북 기간 활동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南 대북정책 또 비난... "우리에게 변화 기대말라"(1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불순한 야망을 드러낸 체제대결각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대북정책'으로 들고 나온 '신뢰프로세스'는 동족에 대한 적대적 관점과 체제대결 기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박 대통령이 '북한의 변화'를 언급한 데 대해 "괴뢰패당은 집권 초기부터 줄곧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이니, '진정한 변화'니 뭐니 하며 우리의 정책과 노선을 악의에 차서 헐뜯고 나중에는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오만방자하게 놀아댔다"고 지적함.
- **北 통신, 군수시설 화재·폭발설 부인... "남의 모략"(1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북한의 군수 시설에서 최근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국내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며 "비열한 모략행위"라고 비난함.
 - 통신은 '비열한 모략행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9월 평안북도 군수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양강도에서 군수물자를 수송하던 열차에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이 같이 주장함.
- **北 조평통, 차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언급 비난(11/6, 연합뉴스)**
 -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발언에 대해 "진정으로 정상회담을 바란다면 올바른 예의부터 갖추라"라며 비난했다고 6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필요한 때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험담을 마구 쏟아내는 것은 결코 정상회담을 하려는 자세가 아니며 자기의 도덕적 저열성과 상식 이하의 무례를 드러낼 뿐"이라고 밝힘.



- **北매체,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비난…"유신독재 부활"(11/7, 연합뉴스)**

 - 북한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정부의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유신독재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한것을 7일 연합뉴스가 전함.
 -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문제 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괴뢰보수패당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책동을 가만 놔둔다면 잔악한 제2의 유신독재가 부활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남한 각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北, 국정원 첩자 체포 주장…당국 "사실무근"(종합)(11/7, 연합뉴스)**

 - 북한이 국가안전보위부(우리 국가정보원에 해당) 대변인을 통해 밀입북한 국정원 '첩자'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고 7일 연합뉴스가 전함.
 - 보위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 공화국 경내에 침입한 남조선 정보원 첩자가 체포됐으며 최근 해당 기관에서는 수도 평양에 침입한 정체불명의 대상을 단속했고 그가 제3국에서 밀입북하여 평양까지 침입한 남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자백했다"고 밝힘.

- **北단체 "南, 日 집단자위권 인정…반민족적 범죄"(11/7,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선전기구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가 남한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남한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공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옹호하고 해외침략의 길을 열어주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밝힘.

- **北 노동신문, 한미 연합전구사령부 창설 계획 비난(1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8일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뒤 새로 창설할 한미 연합지휘기구인 '연합전구사령부'를 비난함.
 - 신문은 '북침전쟁기구'는 지체없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달 7일 창설 35년을 맞은 한미연합사령부를 "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북침전쟁 도발을 위한 범죄적인 군사기구"라고 주장함.
 - 더하여 한미 연합전구사령부에 대해서도 "연합군사령부의 해체를 구실로 새로운 지휘기구를 내오려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백지화하고 내외 여론을 속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北 조평통 "北주민 유인·납치 가담자 처단" 위협(11/8, 연합뉴스)**

 -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한 정부가 정보기관 등을 이용한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탈북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단하겠다는 발언을 8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납치와 인신매매



행위에 가담한 자들, 우리를 혈투는 모략선전에 나선 자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주권과 주민들의 인권을 해친 자들은 그가 괴뢰정보원 요원이건, 심부름꾼이건 관계없이 우리의 무자비한 처단 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밝히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처단의 첫 번째 대상으로 지목함.

- **北 조평통, 南 첨단무기계획 비난… "북침전쟁 준비"(11/9,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9일 우리 정부가 미국의 첨단무기를 구입하려는 계획을 "북침전쟁 준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밝힘.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에서 우리 군이 최근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의 도입을 결정하는 등 "미국산 첨단무기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이 땅을 새 세계대전의 발화점으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장웅 北 IOC 위원 "남북 태권도 협력 합의문 마련 중"(11/6, 미국의소리(VOA))**
 - 남북이 각각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조직이 상호 인정과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인용해 6일 전함.
 - 장웅 위원은 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F)과 북한 주도의 국제태권도연맹(ITF)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합의문을 마련 중이라며 "태권도의 뿌리가 하나라는 데 기초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전 세계에서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는 취지라고 밝힘.
- **北 영통사 남북 합동법회 봉행…"평화·통일 기원"(1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개성 영통사에서 7일 '영통사 낙성 8주년 및 대각국사 의천 912주기 열반 다례제 남북 합동법회'가 봉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법회에는 대한불교 천태종 승려·신도,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중앙위원회 교직자, 영통사 승려·신도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법회에서 '조국통일기원 남북 불교도 공동발원문'을 낭독함.
- **北, 개성공단 3개 분과위 13~14일 개최 입장 통보(종합)(11/8,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3개 분과위원회를 오는 13~14일에 열지는 입장을 8일 우리 측에 전달했으나 연내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통신·통관·통행 문제를 다룰 '3통 분과위' 개최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음.



■ 기타 (대남)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대답(11.6)】 대통령의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 언급 관련 "대내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는 궁여지책으로 무엇이라고 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 이라고 비난(11.6, 중통·중방)
 - 정상회담을 바란다면 올바른 예의부터 갖추어야 하며 필요할 때 언제라도 만날수 있다고 하면서 험담을 쏟아내는 것은 정상회담을 하려는 자세가 아님.
 - 대화와 협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우리(北)의 입장은 시종일관하며 南 당국의 태도를 계속 지켜볼 것임.
- 우리 정부의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킬 체인(kill Chain)' 구축 계획을 "미국의 대아시아 침략전략에 복종되는 한갓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미일 군사공조 강화' 비난(11.7, 평방/내외의 경계심을 자아내는 군사적 공모결탁)
 - 「중통 논평」 우리 정부의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 전면가입 부인' 및 KAMD 구축 계획 또한 '미국의 MD 책동에 전면가담 정체를 가리기 위한 술책'으로 이는 "미국의 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등을 끌어들이는 데서 드러나고 있다"고 공세(11.7, 중통)
- 【「조평통」 대변인 담화(11.8)】 우리 정부가 '北 주민들에 대한 유인납치와 탈북자들을 이용한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유인·납치·모략선전·인권을 해친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처단' 위협(11.8, 중통·중·평방)
 -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납치와 인신매매행위에 가담한자들, 모략선전에 나선자들을 비롯하여 주권과 주민들의 인권을 해친 자들은 무자비한 처단대상으로 될 것이며, 단호한 행동조치는 선포된 이 시각부터 즉시 시행되게 될 것임.
 - 국가안전과 자기 국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우리의 단호한 조치는 공화국법에 따른 응당한 권리이며 국제법에 비추어 보아도 정정당당한 것임.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주인의식' 북핵에 새 변수···韓 '중심적 역할' 주목>(11/4, 연합뉴스)
 -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하자마자 "북한 문제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진 나라로서 관련국과의 협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최대 당사자임을 언급한 것은 미중 양국 주도로 흘러가던 북핵 6자회담 재개 논의에 실질적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이자 북한의 '통미봉남'식 접근에도 견제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됨.
 - 미국, 중국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북핵 논의를 넘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틀과 맞물려 '그랜드 디자인'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가 어떤 아이디어와 역할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북핵 논의와 남북관계를 두 축으로 하는 한반도 정세가 선순환구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中 "6자회담 재개, 합리적 대화문턱 설정해야">(11/5, 연합뉴스)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둘러싼 관련 당사국들의 견해차에 진전이 있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반도의 비핵화 실현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각방은 다시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 합리적인 대화문턱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홍 대변인은 "우리는 최근 반도 정세에 전체적으로 완화의 실마리가 있다고 본다"며, "이런 국면은 쉽지 않게 오는 것으로 각 방은 접촉을 강화하고 긴장을 풀고 대화소통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어 "반도문제는 지속가능하고 불가역적이며 믿음이 쌓이는 과정 안에 답아야 한다"며, "동시에 균형감 있게 각방의 관심사항을 해결하고, 9·19 공동성명의 목표를 병행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미, 6자 재개조건 '마라톤 협의'···"세부사안 조율">(11/5, 연합뉴스)
 -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조태용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4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오후 4시간 가까이 들린 데이비스 미국 측 수석대표와 회담을 가졌음.
 - 회동에서 미국 측은 최근 우다웨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방미를 계기로 이뤄진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측과 회담 재개조건과 향후 예상되는 의제 및 수순 등을 집중



협약했음.

- 회동 직후 조태용 대표는 "한미는 서로의 생각이 같고 일관돼있다는 것은 재확인했다"고 말했으며, 데이비스 대표도 "일련의 훌륭한 토론기회를 가졌다"며 양측은 내일 오전다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음.

● <한미·북중 동시접촉...북핵대화 움직임 분주>(11/5, 연합뉴스)

- 4일 중국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전격 방북은 한미 수석대표의 회동시기와 맞물려 비핵화 논의에 있어 긴박함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지난달 28~29일 미국 수석대표와 회동했던 우다웨이의 방북이 빠른 감이 있어 일각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미중간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이와는 반대로 우 대표가 미국과의 협의에서 확인한 입장차를 토대로 북한의 추가적인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방북했다는 관측도 있음.
- 정부 소식통은 5일 "현재는 한미 양국이 기본 입장을 토대로 중국을 통해 북한을 끌어오는 과정"이라면서 "이런 면에서 활기를 띤 것은 맞지만 아직 회담 재개 문제가 급물살을 타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 <미 태평양사령관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심각하게 인식">(11/6, VOA)

-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의 아태평양 지역의 군사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이 미국을 타격할 것에 대비해 군사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능력을 갖췄느냐는 물음에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북한은 국제사회가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믿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북한이 잠재적으로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가정하고 본토의 미국민과 이 지역의 우방의 국민을 보호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게 내게 주어진 임무"라고 설명했다.

● <한미일, '중중재안 현단계선 수용어렵다' 입장 정해>(11/7, 연합뉴스)

-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한반도 상황과 6자회담 재개 조건 등의 현안을 두고 3자 회담을 진행했음.
-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준수 후 회담 재개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 대표가 미국 측에 전달한 '재개조건'에 대한 평가도 했다고 전해짐.
-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중국이 과거보다는 북핵 포기 쪽으로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지만 한미가 보기에는 좀 더 진전된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현 단계에서 중국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됨.

- 3국은 이에 따라 현재 북한을 방문중인 우다웨이 대표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으며, 조태용 본부장은 이번 방미 이후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후속 협의를, 데이비스 특별대표도 이달 중 중국에서 우다웨이 대표와 회동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정부 "6자회담 문제, 중지 모으는 과정 계속">(11/7, 연합뉴스)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북핵 6자회담 재개 조건 등을 놓고 진행중인 참가국들 간의 논의와 관련 7일 정례브리핑에서 "누가 이야기하고 누가 거부했다는 표현보다는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에 있고 이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중국의 중재안을 거부했다는 표현보다는 현재 3국(한미일)간, 또 관련 국가들 간에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아직은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나. 미·북 관계

● <북한 '화성 13호'모형이지만 무섭게 개선중>(11/5, 연합뉴스)

-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과 에어로스 페이스 코퍼레이션의 존 실링 박사는 4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웹사이트인 '38노스' 공동 기고문에서 "화성 13호는 현재 작전 가능한 무기는 아니지만 개발 단계의 미사일임은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지난 7월 나타난 화성 13호가 지난해 4월 군사퍼레이드에서 선보인 같은 종류의 미사일에 비해 깔끔하게 정리된 탄두부분, 리벳접합 등 세부 형태에서 디자인이 안정돼 있음에 주목해 "아직은 모형이지만 무섭게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북한이 지난해 말 기술적으로는 ICBM 발사나 마찬가지인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도 상기시켰음.

● <美 "킹 특사, 北 재초청時 곧 방북"...18일 방한 주목>(11/8, 연합뉴스)

-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의 북한 억류 1년 즈음해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북한이 다시 초청하면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배씨 석방을 위한 인도주의적 임무를 위해 북한 방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 킹 특사는 내주부터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를 순방할 예정이며, 우리 정부 관계자는 "킹 특사가 18일부터 이틀간 방한해 정부 관계자들과 NGO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면서 "일본 등 지역 순방차 서울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 킹 특사는 지난 8월 말 한중일 순방 도중 돌연 방북을 추진, 북한 당국



과 배서 석방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초청을 막판에 철회하면서 방북이 무산됐던바 이번 순방에서도 방북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음.

- <北 신문 "아태지역 평화 위협 장본인은 미국">(11/9,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장본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력 증강으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특히 새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군사령관이 최근 미 지상군의 주한미군 기지 순환배치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는 미국의 탐욕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미국과 더불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일본을 꼽으며 일본이 자위대를 앞세워 군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어 노동신문은 "현 시기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을 가시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하루빨리 남조선강점 미군 철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 중·북 관계

- <中 우다웨이, 방북 일정 마치고 귀국>(11/8,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을 방문한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 외 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닷새간의 방북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보도했음.
 - 우 대표는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과 회담한 데 이어 이달 4일 북한을 방북했으며, 방북 기간 우 대표는 미국 측과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측과 6자회담 재개조건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됐음.
 - 북한은 우대표의 방북 활동 등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으며, 중국 외교부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우 대표가 북측과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우 대표의 방북 결과를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음.

라. 일·북 관계

- <방북 이노키 의원, 日체육단체 평양사무소 개설 합의>(11/4,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을 방문중인 일본 비영리법인 체육평화교류협회 이사장인 아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의원과 북한의 조일 우호친선협회 마철수 서기장이 일본 체육교류단체의 평양사무소 개설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음.
 - 이노키 의원은 이날 조일우호친선협회 고문인 김영일 노동당 비서와 이 자리에 배석한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을 만났으며 이들의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음.
 - 한편 이노키의원은 국회회기 중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했으며, 이에 일



본 5개 정당은 이노키 의원의 징계안을 참의원 의장에게 제출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사령관 "미군 순환배치로 한반도 우려 해소">(11/5, 연합뉴스)
 -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은 4일(현지시간) 미군공보국(AFPS)과의 인터뷰에서 평택 미군기지에 순환 배치한 항공정찰부대를 언급한 뒤 "이는 불안한 한반도 상황에서 오랜 한미 동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음.
 - 특히 "일부 육군 자원에 대한 순환배치를 시작함으로써 한반도 주둔 미군 축소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며, "이는 우리의 역내 입지와 동맹에 대한 의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군이 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상군을 순환 배치한 것은 이 부대가 처음이며, 이에 라클리어 사령관은 한국, 호주, 싱가포르에 대한 미군 순환 배치는 지난해 발표된 신 국방전략지침에 포함된 '재균형'(rebalance)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중국 등의 반발을 감안한 듯 "이는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봉쇄 혹은 위협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정부, 美 도청 추가의혹에 우려표명·설명요구>(11/5, 연합뉴스)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NSA 도청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미국 정부에 이 문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 및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현재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음.
 - 조 대변인은 미국의 각종 도청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 취할 조치는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라면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하고 그에 맞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음.
 - 앞서 NYT는 외교정책, 정보기관 활동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초점지역'으로 분류하고 미국 공관 등에 특별정보수집부를 설치, 운영했다는 내용이 담긴 NSA 문건을 보도한 바 있음.

- <"전작권 전환시점 중요치않아...어떤 결정해도 준비">(11/6, 연합뉴스)
 -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여부는 최종 결정 시점에서 조건이 갖춰졌느냐에 따라 결론 내려져야하지만 군으로서는 2015년 전환이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준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전



환 시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 이어 라클리어 사령관은 "한미 양국 지도자들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이를 재연기하거나 연기하지 않기로 한다면 그 시간에 맞추면 된다"고 강조했다.
- 또한 한미 군사 동맹이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작동하려면 양측의 투자가 더 필요하고 군이 전작권을 차질 없이 전환하도록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확신시키기 위해 어느 부분에서 투자 등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한국, 美·中 놀랄 정도로 대북 선제타격 능력 진전”>(11/8, 연합뉴스)

-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리처드 와이츠 수석연구원은 6일(현지시간) 한미 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한국의 방위산업' 세미나에서 "한국은 대북 선제타격 시나리오에 대비해 중국은 물론 때로는 미국 당국자들도 경각심을 느낄 정도로 큰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 와이츠 연구원은 "대북 선제타격 시나리오는 탄도·순항 미사일과 장거리포 등을 동원하는 것으로,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대응시스템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 그는 그러나 북한 붕괴와 같은 시나리오의 경우 "첨단무기보다는 대규모 지상군투입이 필요한데, 한국은 반대로 병력을 줄이고 첨단무기 도입을 늘리려는 추세"라며 "통일과 같은 비군사적 충돌에 대응하는 태세가 잘 갖춰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 <“록히드마틴 "한국 원하는 시점에 완전무장 F35가능"”>(11/8,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와 록히드마틴사는 7일(현지시간) 한국이 차기전투기 선정과 관련해 2017년 인도를 목표로 F35 전투기를 주문하면 인도 시점에 이 전투기에 완전무장능력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3F가 탑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는 최근 한국의 차기 전투기 선정 경쟁사인 보잉사 측이 F35가 한국이 원하는 시점까지 완전무장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반박한 발표임.
- 한국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보잉사의 F15를 차기전투기로 선전하는 방안을 부결한 바 있으며, 정부는 몇 주 내 F35 전투기처럼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차기 전투기로 선정할 예정이다.

나. 한·일 관계

● <“요지부동” 일본...“위안부 문제 완전·최종 해결”>(11/5,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비판한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가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 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말 작성한 '최근 한국의 정보 발신'이라는 문서에서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 따라 완전히 해결됐음에도 한국 측은 1990년대 초반부터 청구권 협정의 대상 외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적었음.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5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에 "총리관저가 사령탑이 돼 국제 홍보를 전략적으로 전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한 일본의 국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임을 시사했음.
- <백승주 국방차관 "日집단지위권 지금은 때가 아니다">(11/6, 연합뉴스)
 -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6일 니혼게이지아이신문 인터넷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정책을 변경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음.
 - 이어 백 차관은 "주변국들은 일본이 전수방위의 틀을 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역사문제에 있어 일본은 주변국 국민의 신뢰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이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논의를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됨.
 - 그는 또 자위대가 한국 영토나 영해 등에서 활동하려면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미일 양국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으며, 더불어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북한도 포함된다고 밝혔음.
 - <日재계, "韓징용자 소송, 한일 경제관계 훼손 우려">(11/6, 연합뉴스)
 -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와 일본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 등 경제 3단체와 일한경제협회는 6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청구권 문제는 한국에 대한 투자나 사업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어 이들 단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재산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으며, 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양국 경제계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및 경제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답습한 입장 발표에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비롯한 한국 각계는 이를 바로 비판했으며, 가뜩이나 경직된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아베정권 일각서 한일 대신 중일관계 우선론 제기">(11/7, 연합뉴스)
 - 요미우리신문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비판, 한국 사법부의 징용배상 판결 등으로 한일관계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부 안에서 한일관계를 보류하고, 중일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음.
 - 신문은 '한국의 주장이 감정에 치우쳐 있어 냉정한 논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일본 총리 주변 인사의 발언도 소개했음.



- 이어 9일 개막하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 전회)를 계기로 시진핑 정권이 권력기반을 굳히면 대일 관계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음.

● <朴대통령 "현재상황 한일정상회담 양국관계 악화">(11/8, 연합뉴스)

-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한국-EU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한다면 "양국 관계 악화라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본 지도자들의 전향적 역사 인식을 촉구했음.
- 일본의 일부 지도자들의 퇴행적인 발언으로 한국 국민이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려되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양국 관계가 악화 될 수도 있다고 밝혔음.
- 한편 헤르만 반롬포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냉각된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나 전략적 이익을 기반으로 해결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답했으며, 독도 갈등은 국제법에 기반해 해결해야 하며 EU는 어느 편도 들지 않을 것임을 밝혔음.

다. 미·중 관계

● <“중국군, 사이버공격 배후 지목에도 활동 여전”>(11/7, 연합뉴스)

- 미국 의회의 자문 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6일(현지시간)로이터에 공개한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2013년 내내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에 관한 내용이 세상에 공개됐지만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이버 공격에 활용하는 수단과 기반시설만 바뀌었다"고 밝혔음.
- 앞서 2월 미국 컴퓨터 보안전문업체 맨디언트는 중국 인민해방군(PLA) 부대가 미국과 외국 기업 등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왔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 폭로가 있고 나서 불과 수주 후부터 중국 해커들의 활동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덧붙였음.
- 이와 관련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사이버 공격은 초국가적이며 익명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며 "보고서에 언급된 증거들이 어떻게 수집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음.

라. 미·일 관계

● <“미군 무인정찰기 2~3기 내년 일본에 배치”>(11/3, 연합뉴스)

- 아사히신문은 미일 정부가 괌에 배치된 미군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2~3기를 내년 봄 이후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로 이전, 일정기간 배치하는 방안을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음.
- 글로벌호크는 태풍으로 괌에서의 장거리 비행이 어려워지는 여름을 중심으로 연간 수개월씩 미사와기지에 이동 배치, 북한 등 주변국을 감시



하게 되며, 자위대도 미일 쌍방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2015년 같은 기종을 3~4기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함.

- 국제사회로부터 무인정찰기의 군사 사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본 방위성은 "공격능력이 없는 정찰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日, 이지스함 8척태세로 증강...10년내 2척 추가배치>(11/5, 연합뉴스)

-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포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향후 10년 내에 추가 배치하는 방향을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음.
-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는 6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4척은 해상배치형 포격미사일(SM3)을 탑재하고 있으며, 나머지 2척에는 미국과 공동개발중인 차세대형 포격미사일 'SM3블록2A'를 탑재하는 방향으로 개량중임.
- 일본 정부는 올해 연말에 결정되는 새 '방위계획 대강'에 이지스함 태세를 8척으로 증강한다는 방침을 명기할 예정이라고 함.

● <日, NSA 파문 美에 직설... "신뢰손상 행위">(11/5,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노테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5일 기자회견에서 NSA의 대일 정보활동에 대해 "동맹국 관계를 포함해 우방국가와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음.
- 가토 가쓰노부 관방 부장관은 "지금까지도 미일 간에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며 "한층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미국 측에 제의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에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해 인터넷으로 공개한 기밀 문서에 따르면 NSA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도 정보 수집 대상 국가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 <日 IHI, 스텔스전투기 F35 엔진 공동 생산>(11/06, 연합뉴스)

-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IHI는 미국 록히드 마틴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최신포 스텔스 전투기 'F35' 엔진을 미국 프랫 휘트니(P&W)와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 F35 관련 부품 생산에 일본 기업의 참여가 확정된 것은 처음으로, IHI가 납품하는 부품 중에는 엔진의 중핵 부품인 터빈, 팬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며, IHI외에도 미쓰비시 전기와 미쓰비시중공업도 참여한다고 전해졌음.
- 한편 F35는 미국, 영국 등 9개국이 공동 개발중으로, 양산을 하면서 2019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일본은 F35를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투기로 선정, 도입하기로 했음.



마. 중·일 관계

- <중국, 미사일부대 미야코섬 주둔에 불만표출>(11/7, 연합뉴스)
 - 환구시보는 6일 중국 함대의 서태평양 진출 주요 통로로 사용하는 미야코 해협 인근에 일본이 미사일부대를 배치하자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기사를 보도했음.
 - 신문은 미야코 섬에 지대함 미사일부대가 주둔함으로써 일본은 기존 나하섬 미사일부대와 함께 센카쿠를 공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을 뿐 아니라 유사시 미야코 해협을 봉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음.
 - 중국은 일본의 미사일부대 진주 목적을 자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해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구시보는 일본이 또다시 중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게 됐다고 평가했음.

바. 기 타

- <中, 일·러 군사훈련 합의에 반응 자제>(11/4, 연합뉴스)
 - 홍콩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최근 아태지역 안보문제와 관련해 협력을 추진하고 합동 군사훈련에 합의한 데 대해 "우리는 유관국가들의 협력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음.
 - 홍콩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일본과 러시아가 군사적 협력을 모색하는 데 대한 중국 정부의 복잡한 속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초 취임하자마자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중러관계 밀착에 공을 들여온 반면 센카쿠 분쟁 대상인 일본에 대해서는 연일 공세수위를 높여왔음.
- <日외무상, "침략 인정한 무라야마 담화 승계">(11/5, 교도통신)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5일 오후,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인식에 대해 1995년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담화 가운데 일본의 '침략'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답습하고 있다고 밝혔음.
 - 기시다 외무상이 이번에 '답습' 자세를 분명히 밝힌 것은 무라야마 담화 중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국가 특히 아시아 여러 국가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는 부분이며, 아베 신조 수상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번 발언은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됨.
 - 한편,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지난 5월 참의원 답변을 통해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을 뿐 '침략'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언급은 하지 않았음.
- <바이든 미 부통령, 다음달 한-중-일 순방>(11/5, VOA)
 -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12월 첫째주 한국과



중국, 일본을 순방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3개국 정상을 만나 외교, 경제, 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동북아시아 3국 순방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ward Asia)의 중요성을 여전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순방으로 풀이됨.
 - 백악관은 한국을 방문해서는 "특히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일 센카쿠 충돌 때 한국 '중재역' 맡을 가능성>(11/7, 연합뉴스)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5일(현지시간) 오후 전직 국무부 고위관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 분쟁 가상 시나리오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한국이 중재역을 맡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이날 패널로 나온 리터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등 토론자들은 각기 역할분담을 한 뒤 중일 군사충돌 상황에 대비한 가상 NSC 긴급회의를 직접 시연했고, 세부내용은 비공개했음.
 - 중일 양국 사이의 '핫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일부 토론자들은 중국 일본과 관계가 좋은 한국이 잠재적 중재역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주최 측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가상 시나리오이지만 양측의 갈등관계를 고려할 때 얼마든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에 따라 한국의 몸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한중일 차관보급 회의...3국 정상회의 개최노력 지속>(11/7, 연합뉴스)
- 이경수 한국 외교부 차관보,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7일 서울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고위급 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 개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음.
 - 3국은 이날 회의에서 3국간 협력 동력을 계속 유지·강화하기로 했으나,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의 공감대만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이나 의제는 잡지 못해 연내 정상회의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임.
 - 이번 회의는 과거사·영토 갈등 문제로 인한 관계 악화로 지난해 3월 베이징에서 열린 3국 차관보급 회의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렸으며, 특히 중일갈등의 폭이 커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한·중·일, 26~29일 일본서 FTA 3차 협상>(11/7, 연합뉴스)
- 한중일 FTA 제3차 협상이 26~29일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지난



- 1, 2차 협상에 이어 한중일 FTA협상은 관세철폐, 투자, 전자상거래 등 15개 분야의 시장을 서로 개방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함.
 -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관세철폐가 주 의제인 이번 협상에서 무역품목 수입관세 철폐율을 "10년내 90%이상"으로 하자고 한국, 중국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음.
 - 신문은 앞서 일본은 지난 8월 상하이에서 진행된 2차 협상에서 이 같은 관세 철폐율을 제시했으나 한국은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은 "우선 40%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 <리클리어 美태평양군사령관, 아·태 전략 재정립 강조>(11/8, 연합뉴스)
 - 새뮤얼 리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부 사령관은 7일(현지시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초청 강연회에서 "미국이 중동문제에 관심을 쏟는 사이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장기적인 안보 문제가 대두됐다"며 미국의 안보 전략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 리클리어 사령관은 북한 제3세대 독재자에 의한 핵개발과 호전적인 행위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정세는 물론 세계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인도와 중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할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감 고조도 미국이 주시해야 할 문제로 손꼽았음.
 - 또한 그는 이 지역에는 집단안전보장기구가 없어 갈등, 세력균형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집단 안보가 불분명해 질 수 있는바, 미국은 이 지역 국가들과의 균형적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미국에 장기적 이익을 안겨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 "통일부 아니라 인신매매부"(뉴스1, 11.5)
 - 북한 대남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최근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이하 재단)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통일부에 대해 '인신매매부'라며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5일 논평을 통해 재단이 통일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북한 주민들 '도강비'를 대준 것으로 알려진 점을 언급하며 "남조선 괴뢰 패당이 돈을 뿌려가며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유인납치하고 악랄한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광분했다는 것이 다시금 입증됐다"고 주장
 - 논평은 "명색이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전담한다는 통일부가 악화의 길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수습하고 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문제해결에 전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족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반공화국모략과 인권유린범죄에 돈을 퍼부으며 직접 가담하는 범죄적 망동을 저질렀다"고 강조
 - 그러면서 논평은 "현 괴뢰통일부는 반통일부, 대결부, 분열부라는 치욕의 오명과 함께 인신매매부, 유인납치부, 인권유린부로 두고두고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

- 北 조평통 "北주민 유인·납치 가담자 처단" 위협(미국의 소리, 11.8)
 - 북한은 8일 남한 정부가 정보기관 등을 이용한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탈북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단하겠다고 위협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납치와 인신매매 행위에 가담한 자들, 우리를 헐뜯는 모략선전에 나선 자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주권과 주민들의 인권을 해친 자들은 그가 괴뢰정보원 요원이건, 심부름꾼이건 관계없이 우리의 무자비한 처단 대상으로 될 것"이라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처단의 첫 번째 대상으로 지목
 - 대변인은 이어 "추악한 범죄자, 인간추물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해버리기 위한 우리의 단호한 행동조치는 선포된 이 시각부터 즉시 시행되게 될 것"이라며 이 조치가 북한법과 국제법에 따라 정당하다고 주장
 - 대변인은 '최후통첩'의 배경에 대해 국정원이 '두리하나' 등의 단체로 북한 주민의 탈북을 유도하고 탈북자들을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내부교란 등의 임무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美 "킹 특사, 北 재초청時 곧 방북"…18일 방한 주목(연합뉴스, 11.8)**

 -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의 북한 역류 1년에 즈음해 미국 정부가 북한이 재초청 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곧 방북할 수 있다고 언급
 - 하프 부대변인은 "우리는 배씨 건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배씨를 특별사면해 석방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

- **유진벨 재단 회장 "북한 주민 다제내성결핵 심각"(미국의 소리, 11.8)**

 - 한국의 대북 지원 민간단체인 유진벨 재단 인세만 회장은 북한 주민의 다제내성결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
 - 인세만 회장은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달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북한 내 다제내성결핵센터와 다른 지역들을 둘러보고 왔으며 북한은 해마다 일반 결핵환자 가운데 1만 5천여 명이 치료에 실패해 상당수가 다제내성결핵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
 - 또 이번에 개성시 등에 요양소를 개설해 유진벨 재단의 북한 내 활동 지역이 12곳으로 늘었다고 설명

- **"북 지하교인 상당수는 중산층"(자유아시아방송, 11.8)**

 - 미국 서부 콜로라도주의 대북 선교단체 '서울 USA'의 에릭 폴리(Eric Foley) 목사는 8일 북한 지하교인의 다수가 이동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중산층이라고 공개
 - 폴리 목사는 북한에는 물론 가난한 지하교인도 있지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 정권에 외화를 벌어들이는 무역일꾼과 같은 중산층이 기독교에 접할 기회가 더 많다고 주장
 - 이들은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등 비교적 행동이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설명
 - 이러한 설명과 함께 지하교인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도 공개하면서 북한의 지하교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 북한 당국이 도발적인 발언을 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던 지난 봄 북한 지하교인이 굶주리고 더 심한 박해를 받는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기만 작전으로 당시 한국이나 미국 등 외부세계에서는 생활이 더 궁핍해진 북한의 지하교인을 위해 식량이나 돈을 들여보내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 당국이 일부러 흘린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발생한 오해라고 지적

- **WFP '10월 북한 당국 배급량 크게 늘어'(미국의 소리, 11.9)**

 - 북한 당국이 10월에 주민 한 명 당 하루 390g의 식량을 분배해 식량 배급량이 전달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보고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제출한 자료를 인



- 용해 8일 북한 당국의 9월 배급량 310g 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
- 올해 당국의 배급량은 1월부터 5월까지 400g을 유지하다 6월에 390g으로 다소 감소했으며, 7월과 8월 수치는 공개되지 않음.
- 10월 배급량 390g은 세계식량계획(WFP)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에 훨씬 못 미치며, 북한 당국이 배급 목표로 하는 573g에도 못 미치는 수준
- 한편, WFP는 10월 한달 동안 북한 내 148만 5백여 명의 주민들에게 3천868t의 식량을 배급

2. 북한인권

●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내주 방한(연합뉴스, 11.6)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내주 방한
- 외교부 관계자는 6일 "다루스만 보고관이 다음주 중후반께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정기 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련 내용 점검차 연례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
- 다루스만 보고관은 외교부·통일부 등 정부 관계자, 북한 인권 관련 인사 및 단체를 면담할 예정

● 박 대통령, 영국 의회 방문 "북한 인권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들어"(한국일보, 11.7)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5일 (현지시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처음 영국 의회를 공식 방문해 "북핵 문제는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시급한 과제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
- 박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의회인 웨스트민스터궁 로열로빙룸에서 열린 '영국 의원들과의 대화 시간'에서 "저는 북한이 핵을 버리고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와야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

● NKHR, 시카고서 대규모 북 인권행사(자유아시아방송, 11.7)

-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NKHR)는 6일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참혹한 인권유린을 고발하는 대규모 인권회의를 미국의 대도시 시카고에서 성공적으로 개최
- 미국의 로버트 킹(Robert King) 북한인권특사는 6일 북한인권위원회와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인권행사(The Heart of Darkness: North Korea's Hidden Gulag)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
- 킹 특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달 말 가진 유엔 총회 중간



- 보고에서 중국과 라오스 대표 측이 탈북자 강제복송 정책을 변명하는 등 국제적 압박에 대한 반응을 나타냈다고 하며 더 많은 지지를 호소
- 이날 행사에는 킹 특사와 14호 개천수용소에서 태어난 탈북자 신동혁 씨, 한국의 김태훈 인권변호사 등 미국과 한국의 관리, 학자, 전문가 170여 명이 참석
 - 미국, 한국 등 40여 개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의 제라드 겐서(Gerard Genser) 법률고문은 북한의 인권유린은 국제법상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라며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고 지적
 - 군사전문가로 상업용 위성분석을 통해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면밀히 관찰해 온 조셉 버뮤데즈(Joseph Bermudez)씨는 향후 정치범수용소 등 인권 유린에 관한 책임자 처벌에 위성사진이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
 - 일리노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리처드 허사우트(Richard Hirschhaut) 대표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을 밝힘.

3. 탈북자

- **탈북주민지원 '서울 편중' 심각... 지방정착 기피 요인(수원일보, 11.4)**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주민들의 정착, 커뮤니티, 교육 등을 위해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이 지나치게 서울에 집중돼 탈북주민들의 지방정착 기피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
 -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각종 공모를 통해 ▲각종 커뮤니티 활동 지원 1억 2천만 원 ▲정착지원 3억 8천만 원 ▲지역 특화사업 1억 8천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 예산이 지나치게 서울에만 편중돼 있다고 지적
 -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현황을 보면, 서울에 6,418명이 거주해서 28%의 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 지원내역을 보면 서울지역단체에 1억 414만 원이 지원돼 지원액의 90%를 차지
 - 반면 서울보다 더 많은 탈북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 단체에는 2군데에 350만 원(3%)에 불과하고, 16개 시·도 중 9곳에는 전혀 지원이 없음.
 - 원혜영 의원은 "단체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핑계일 뿐 여전히 서울 중심의 사고가 편중 지원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탈북자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민간의 정착지원 참여 확대라는 본래 사업 의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공모만 받아서 '사업을 위한 사업, 집행을 위한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
- **"北여성, 비자 받고 중국 방문해 보이스포싱"(데일리NK, 11.4)**
 - 탈북자들을 비롯해 비자를 받고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이 한국 국



- 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과 성인용 화상채팅 불법 업종에 종사
 - 북중 무역업으로 현지 사정에 밝은 연변(延邊) 지역 한 소식통은 "최근 중국에서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과 성인 화상채팅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늘어났다"면서 이들 업자들은 한국말을 비교적 잘 하는 중국내 탈북자들을 고용
 - 탈북자뿐 아니라 중국에 도움을 받기 위해 사사(私事)방문(친척방문)한 주민들과 비자를 받고 중국에 방문한 주민들도 보이스피싱과 성인 화상채팅 불법 업종에도 종사
 - 이들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업자들의 말을 듣고 일하게 되는 것
 - 특히 소식통은 "중국에서 북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돈을 벌기 용이하다"면서 "남자들은 중국에 왔다가 친척에게 돈을 방조(傍助) 받고 바로 북한으로 돌아가는 편이고 여성들은 남아서 이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
 - 소식통은 "탈북여성들보다 북한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나온 여성들이 신분상 안전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화상채팅방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더 유리하다"면서 경제적인 형편이 괜찮고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
- "탈북자 통한 2차 탈북 차단 위해 감시·통제 강화"(데일리NK, 11.4)
 - 북한 당국은 최근 행불자와 탈북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자, 인민반장을 비롯해 해당 보안원(경찰)을 통해 가족들의 동향을 24시간 감시
 - 양강도 소식통은 4일 최근 도(道)내 분주소(파출소)의 지시에 따라 인민반장들이 동네에 어머니 아빠 중에 사망하지 않고 중국에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행불자가 있는 가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인민반장들은 보안서에 이를 보고하고 탈북 등 특이 동향이 있는 가정에는 보안원이 직접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
 - "탈북한 가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수시로 보안원이 드나드는데 해당 집과 가까운 척하면서 매일 가족의 인원수를 확인한다"면서 한 사람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또 소식통은 "대부분 행불자는 중국을 통해 남한에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행불자와 탈북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자, 이들을 통한 2차 탈북을 막기 위해 탈북자가 있는 가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 인권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권고(뉴스1, 11.5)
 -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원만한 국내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해 통일부에 정착지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직업훈련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직업훈련과 취업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 또한 국민인식개선과 관련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사업 강화와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
-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후 1년이 경과해 보호를 신청할 경우 보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함.

● **탈북 여성에 "첫 남자 누구냐" 신문한 국정원(경향신문, 11.6)**

-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이 5일 공개한 '탈북자 정부합동신문센터 신문 실태' 관련 보고서들을 보면, 탈북자의 절반 정도는 신문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등의 언행으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알려졌으며 국정원이 탈북자들에게 대해 한국 입국 직후 벌이는 신문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가 자행
- 탈북자들에게 국내 일반인과 달리 수사과정상 보장되는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발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조사기간에 대한 설명을 못 받거나(63.8%), 독방생활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69.3%)가 다수
- 성경험이 있는지 조사를 받은 경우는 17.9%, 여성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지 못한 탈북여성은 70.9%
- 장하나 의원은 "국정원이 탈북자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흔들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과정상 탈북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

● **탈북자 지원금 부정 수급, 직업훈련원장 '징역형'(노컷뉴스, 11.6)**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8일 탈북주민에게 가짜 직업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줘 정부지원금을 타내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산 모 직업훈련원 원장 최모(44, 여)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8천여만 원, 범행에 가담한 김모(31, 여) 씨 등 새터민 5명에게 각각 징역 4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 송 판사는 "최 씨가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해 취득한 수익금이 크고, 비슷한 범죄로 재판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도 범행을 되풀이 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
- 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이탈주민 142명에게 각각 50~200만 원을 받고 허위 간호조무사 취득과정 수료증을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회부
- 가짜 수료증을 넘겨받은 새터민 중 39명은 통일부에 직업훈련장려금을 신청해 1억 6천9백여만 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 **"몽골, 탈북자 문제 최소화 노력"(자유아시아방송, 11.6)**

- 최근 몽골 대통령의 방북 당시 몽골을 통한 탈북자의 한국행 문제도 논



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몽골 당국은 탈북자로 인한 주변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길 원한다는 지적이 제기

- 미국 '몽골리아소사이어티'의 대표인 알리시아 캠프(Alicia Campi) 박사는 5일 미국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에서 차히야 엘베크도르지 몽골 대통령의 최근 북한 방문과 관련한 강연에서 몽골을 통한 탈북자의 한국행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
- 캠프 박사는 현재 몽골 정부는 탈북자 관련 문제로 북한이나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길 원치 않아 어떻게든 최소화하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
- 몽골은 한국과의 관계도 고려해 탈북자의 몽골 유입과 한국행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으나, 탈북자 단속과 관련한 양국 간 협조가 더 강화됐을 수 있다면서 이번 몽골 대통령의 방북 이후 몽골을 경유한 탈북자의 한국행이 다소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 서울서 탈북자 구출 기금 마련 영화 상영(자유아시아방송, 11.5)

- 한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오는 10일 서울에서 탈북자 구출 기금 마련을 위한 인권 영화 상영회를 개최
- 한국의 대북인권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의 릴리안 리 간사는 오는 10일 서울 도심 명동에서 북한 인권을 알리고 탈북자 구출 기금을 모으기 위한 영화 상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5. 납북자

● 전시납북자 가족, 유엔에 가족 생사확인 요청키로(연합뉴스, 11.6)

- 6·25전쟁 중 납북된 인사들의 가족이 북한에 끌려간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유엔기구에 요청할 예정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회)는 6일 "이미일 가족회 이사장 등이 이달 18~19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유엔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에 전시납북자 100여 명의 생사확인 의뢰서를 직접 제출할 것"이라고 전달
- 가족회 관계자는 또 이미일 이사장이 제네바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관계자들도 만나 COI가 유엔에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에서 전시납북자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호소할 계획이라고 언급
- 한편 가족회는 이날 국제우편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오준 주 유엔 대표부 대사, 최석영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 등에게 호소문을 보내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책임을 물어 전시납북자 생사확인 및 사망자 유해 송환, 생존자 보



호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미 단체, 북에 매달 영양쌀 35만끼 지원(자유아시아방송, 11.4)
 - 미국 북동부 미네소타 주의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국제 식량 구호기관인 FMSC(Feed My Starving Children)는 영양실조 상태인 북한 어린이를 위한 지원을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
 - 이 단체의 홀리 도네이토 대변인은 구호단체들의 지원 요청을 받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30가지 성분으로 만든 영양쌀을 직접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언급
 - FMSC의 영양쌀은 미국과 캐나다의 대북지원단체인 '코리아 친선 네트워크(Korean Friend Network)'와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한-슈나이더 국제아동재단' 등을 통해 황해북도와 평안남도, 그리고 평양의 어린이와 장애인 시설에 전달
- 프 NGO, 식수 위생 사업 완료(자유아시아방송, 11.4)
 - 프랑스의 민간 구호 단체인 프리미어 위장스는 황해남도 해주에서 프랑스에서 파견된 식수와 위생 전문가가 함께 한 식수 시설들을 복구해주는 공사가 올 여름 마무리됐다고 전달
 - 프리미어 위장스의 프레드릭 파스칼 대북 사업 담당관은 4일 프랑스 정부에서 지원받은 미화 약 20만 달러의 자금으로 황해남도 해주의 농장에서 관개수로 건설 및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펌프 시설을 개보수해주는 등 식수와 위생 개선 사업 진행을 설명
 - 파스칼 담당관은 올해 관개 시설 보수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앞으로도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로 내년에도 1~2번 정도 더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
 - 이 밖에도 유럽연합으로부터 미화로 160만 달러를 지원받아 황해남도 해주에 있는 협동농장 네 곳에서 염소를 길러 치즈와 요구르트를 생산하고, 이를 유치원과 학교의 1만5천 명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
 - 염소 농장에서 생산한 치즈로 어린이들에게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성분을 지원을 도모하며,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한 두유도 함께 지원
- 대한결핵협회, 북한 해수에 결핵병원 설립 추진(데일리NK, 11.5)
 - 대한결핵협회는 5일 북한의 결핵퇴치를 위해 황해남도 해수에 결핵병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설명

- 결핵협회는 올해 내에 '해주 결핵요양병원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국내외 결핵치료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해주 지역 결핵 병원 복원을 추진할 예정
- 복원될 병원 명칭이 '해주 코리아 결핵병원(가칭)'인 이 병원은 황해남도 지역의 옛 구세병원으로 남한 의료진이 복원에 필요한 기술 및 의약품 을 지원
- 이를 위해 위원회는 오는 2014년까지 결핵병원 재개원을 위한 현지답사 를 완료하고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
- 결핵협회는 결핵병원의 재개원을 통해 북한의 결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

● **미NGO, 북에 의약품 잇달아 지원(자유아시아방송, 11.5)**

-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인 아메리카어스(Americares)는 1만4천 파운드(약 6.4톤)의 대북 인도적 지원용 의약품이 현재 북한으로 운송 되고 있어 지원이 지속
- 현재 배편으로 배송 중인 의약품은 늦어도 이달 말에 북한에 도착할 예 정으로 이번 지원품에는 알레르기 약과 항생제, 호흡기 질환 치료제와, 심혈관 질환 치료제, 목발과 보행기 등 의료 보조기와 붕대 등도 지원품 에 포함
- 북한에 전달된 의약품은 평양과 황해북도의 6개의 병원과 진료소로 보 내져 분배될 것
- 이 단체의 대변인은 또 이번 대북 의약품 지원이 지난 5월에 이어 올 들어서 두 번째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 **오스트랄리아, 올해 대북지원 "0"(자유아시아방송, 11.6)**

- 북한에 연 평균 500만 달러의 식량지원을 해오던 오스트랄리아 정부가 지 난 7월 마감된 2013 회계연도의 해외원조에 대북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 오스트랄리아는 현재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뿐만 아니라 식량 등 인도주 의 지원도 중단한 상태라고 국제개발청이 밝혔으며, 국제개발청의 매간 셔 대변인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6월까지인 2013회계연도 동안 북한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고 설명
- 2002년부터 매년 평균 500만 달러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오던 오스트 랄리아 정부의 대북지원이 중단된 것은 10년 만에 처음
- 셔 대변인은 재해의 규모와 시급함 등을 원칙으로 국제원조를 결정한다 면서 올해 아시아에 대한 지원 중 상당 규모가 내전으로 대량 난민이 발생한 시리아에 집중됐다고 설명
- 오스트랄리아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2002년부터 북한에 대한 직접 적인 개발지원을 중단한 후에도 유엔 기구를 통해 연평균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 지원 진행해왔지만 지난해 5월 이후 이마저도 중단
- 셔 대변인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2014 회계연도 대북지원 규



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에서 식량 구호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들과 협의를 진행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 영 적십자사, 북에 식목, 식수 지원(자유아시아방송, 11.7)

- 영국 적십자사는 6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소식지를 통해 북한에서 홍수로 피해가 커 2천4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충분한 영양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국제적십자사와 조선적십자회와 함께 북한 내 식수 위생 개선 사업과 대규모 나무심기를 통한 자연 재해 감소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
- 북한을 최근 방문한 영국 적십자사의 리콜라스 영 선임관은 "정치적인 고립과는 상관없이, 이 국가(북한)는 재해에 취약하며,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데다가, 보건 체계를 지원할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며 북한에 대한 긴급한 지원을 호소
- 영국 적십자사는 북한에 대규모 나무 심기 사업도 시작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토양 구조가 개선되고, 폭우 등으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 증산을 돕기 위해 종자 생산을 늘리는 기술도 가르칠 것"이라고 설명
- 영국 적십자사의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대표인 램즈미 파룩 대표는 북한의 산림 부족은 우기동안 홍수와 산사태에 취약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

8. 북한동향

- '교학사 역사교과서' 검정심의 합격판정 및 김무성 의원의 발언(교학사 역사교과서 새누리당이 보호) 등을 거론하며 '남 집권세력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친일매국노들의 죄악을 비호하는 반동적인 역사교육의 장본인'이라고 주장(11.6, 평방·노동신문/매국과 독재를 미화하는 반동교육)
-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진보세력에 대한 초토화 행위"라며 "유신체제를 최종 완비하려는 또 하나의 범죄적 책동"이라고 비난(11.6, 중통/제2의 유신 독재의 칼부림)
- 美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우리 대통령 도청 의혹 관련 우리 정부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해 "민족의 존엄에 먹칠하는 너절한 굴욕행위"라며 "미국과 남조선 사이의 주종관계가 다시금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난(11.6, 중통·민주조선/상전에 대한 남조선괴뢰들의 비굴한 추태)
- 11.7 개성 영통사에서 '영통사 복원 8주년 조국통일기원 및 의천대각국사 912주기 열반 다례제 남북 불교도합동법회(南 천태종 승려-신도, 北 조선 불교도연맹 교직자-영통사 승려신도) 봉행(11.7, 중통-평방)



- 조국통일기원 북남불교도 공동발원문에서는 "북과 남의 불교도들은 북남관계 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실천행에 적극 나설데 대하여 강조했다."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